

제13차 미래한국리포트

# 광복 70년 좋은 정부의 조건 전환기를 넘어 착한 성장 사회로

일시 / 2015년 11월 4일 수요일 오전 7시-9시 30분

장소 /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

발표 / 전환기의 정부 / 정호선 SBS기자

'제도의 함정'을 넘어서 /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효율'에서 '역량'으로 /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좋은 정부의 조건 / 장덕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SBS 제언

강평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미래한국리포트는 SBS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가 깊고 넘어가야 할 국가적 의제를 선정해 다각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2004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열 세 차례에 걸쳐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문제를 선제적으로 다뤘습니다.  
아직 사안의 중대성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이전인 2004년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시켰고,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어드는 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미리 내다보고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백년대계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재창조’를 통한 활로를 모색했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고통지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를 주제로 다뤄 녹색성장의 공감대를 확산시켰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전략과 성숙 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적 신뢰와 소통의 대안, 양적 성장 위주의 경쟁 방식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등 국민과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2년에는 성장보다 분배가 시대 정신으로 부상하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 사회를 위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착한성장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조건으로 사회 통합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조명했습니다.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틀,  
즉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사회 ‘공공성의 부재’ 때문에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이 되풀이되고,  
경제도 성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밝히고 한국사회의 재설계를 주문했습니다.

#### 지난 미래한국리포트

- 제12차 한국사회 재설계: 공공성 그리고 착한성장사회
- 제11차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 한국형 거버넌스는?
- 제10차 착한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
- 제 9차 경쟁의 딜레마
- 제 8차 2010 대한민국 ‘소통’
- 제 7차 위기를 넘어서
- 제 6차 기후의 역습
- 제 5차 꿈을 주는 리더십을 찾아서
- 제 4차 행복의 조건과 가족의 미래
- 제 3차 한국의 마지막 선택, 교육
- 제 2차 일자리 위기와 노동의 미래
- 제 1차 고령화 충격, 활로는 없는가?

## 목 차 | CONTENTS

01	개요 및 일정	
04	개회사	이웅모 SBS 대표이사 사장
06	축사	황교안 국무총리
10	PRESENTATION 1	전환기의 정부 / 정호선 SBS기자
62	PRESENTATION 2	‘제도의 함정’을 넘어서 /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100	PRESENTATION 3	‘효율’에서 ‘역량’으로 /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136	PRESENTATION 4	좋은 정부의 조건 / 장덕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176	PRESENTATION 5	SBS제언
188	강평	최경환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SBS 대표이사 사장  
**이웅모**



“희망찬  
한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 좋은 정부의 조건 전환기를 넘어 착한 성장사회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사장 이웅모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님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등 정부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님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여러분과 자리 함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경제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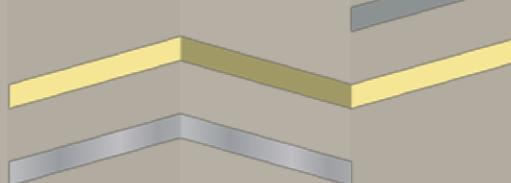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 사회발전을 함께 이룩한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다른 개발도상국가에 비해 높은 성취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역할이 남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광복 70년 동안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압축 성장과 발전이 초래한 사회부문들 사이의 불균형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복 이후 70년 동안 한국사회의 변화과정과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짚어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책임질 수 있는 좋은 정부의 조건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입니다.

SBS는 오늘 행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좋은 정부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온갖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위대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직면한 전환기의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13차 미래한국리포트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3번째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SBS는 그동안 '미래한국리포트'를 통해 경제위기와 고령화 문제, 일자리 창출과 교육문제 등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광복 70년, 좋은 정부의 조건'을 주제로 한 이번 발표회에 대한 우리의 기대도 매우 큽니다.

이처럼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SBS 윤세영 회장님과 이웅모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지난 70년 동안,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함께 이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공의 역사는 계승하고 부족했던 과거는 보완하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좋은 정부를 이루기 위한 제도 개혁과 역량 제고 방안을 제언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경제부흥과 문화융성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민생활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변화와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금융개혁과 교육개혁의 4대 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우리 사회를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면 국민행복의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분이 발표할 '미래한국 리포트'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 미래 전략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주게 될 것입니다. 향후 우리나라 정부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가 대한민국의 더 큰 희망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를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히스토리 / 주제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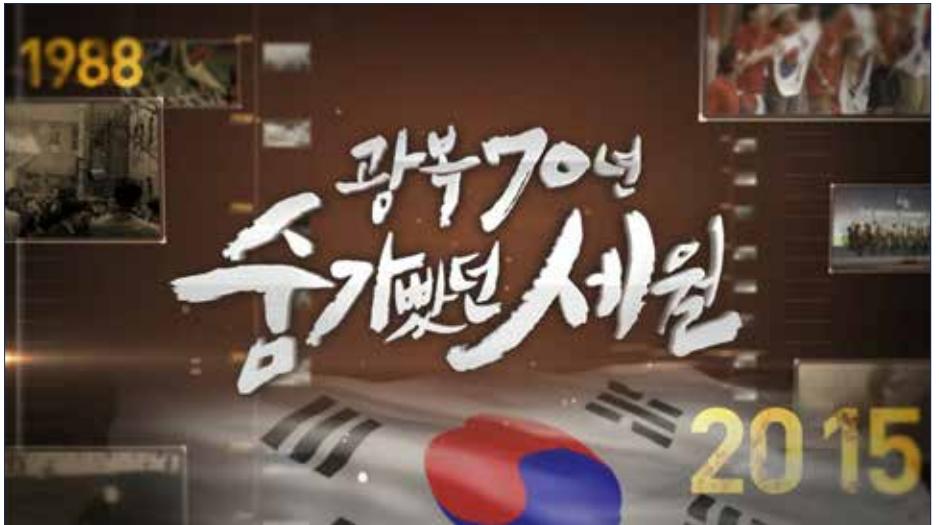
SBS 미래한국리포트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점검해 미래에 닥칠 위기들을 한발 앞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미래한국 리포트는 2004년 첫해에 고령화 충격, 활로는 없는가를 통해 처음으로 고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어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점을 파헤친 '일자리 위기와 행복한 가정의 조건' 환경 문제를 글로벌 관점에서 조망한 '기후의 역습'을 다뤘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적인 발달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유발되는 이유는 '소통'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사회의 질' 향상을 통한 지속 성장 사회를 주제로 체계적인 연구를 해왔습니다. 2012년에는 바람직한 복지국가의 방향을 보여줬고 2013년에는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공성 회복을 통한 '한국사회 재설계'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올해는 광복 70년입니다.

한국이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 사회발전을 함께 이룩한 데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는 '전환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SBS는 서울대 사회발전 연구소와 공동으로 정부 실패와 성공을 경험한 다섯 나라 한국과 독일, 일본, 프랑스, 호주 등의 사례를 연구 분석해 '광복 70년, 좋은 정부의 조건 - 전환기를 넘어 착한성장사회로'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Presentation 1 전환기의 정부

정호선 SBS 기자

미래한국리포트

FUTURE KOREA REPORT  
2015 · SBS



안녕하십니까?  
SBS 미래부 정호선 기자입니다.

영상에서 보신대로  
지난 7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그리고 빠르게 이뤘습니다.



정부 주도의 산업화는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도약을 이루면서  
'한국적 산업혁명'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무수한 혼란과 희생 속에서  
87년 민주화 성공으로  
자유민주 체제도 안착시켰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발전에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정부는  
민주화와 조국 근대화라는 명확한 비전과  
경제개발계획이라는 실행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데 최적화된  
행정시스템을 만들어  
국가를 경영해왔습니다.



국민들도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시책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압축된 성장의 결과는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를 안겼고,  
이런 숙제들을 풀지 못하고는  
성장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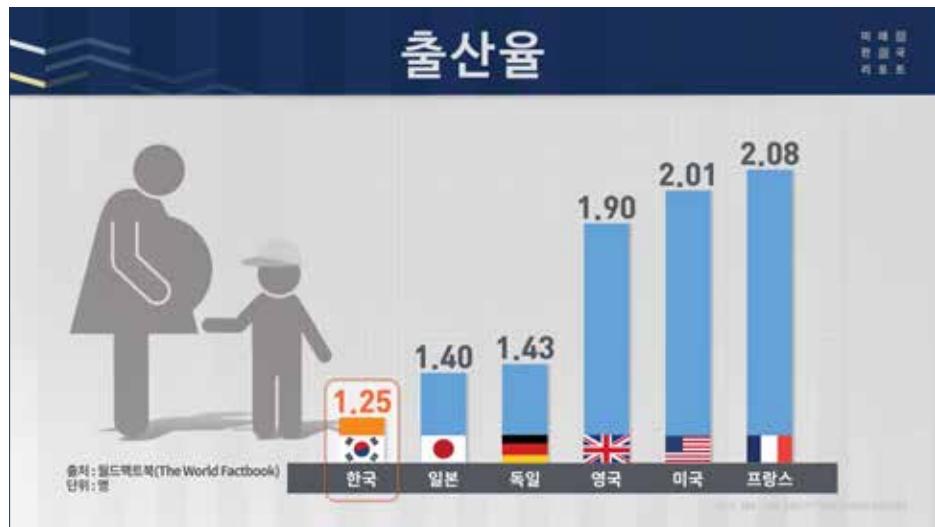


여기 우리가 마주한 숙제를  
잘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과거 노후대비도 못한  
어르신 세대는  
부족한 복지 시스템 속에서  
노인빈곤률 OECD 1위라는  
고단한 삶에 직면해있습니다.



11년째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지표도 있습니다.



10년동안 81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률은 여전히  
전세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선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빠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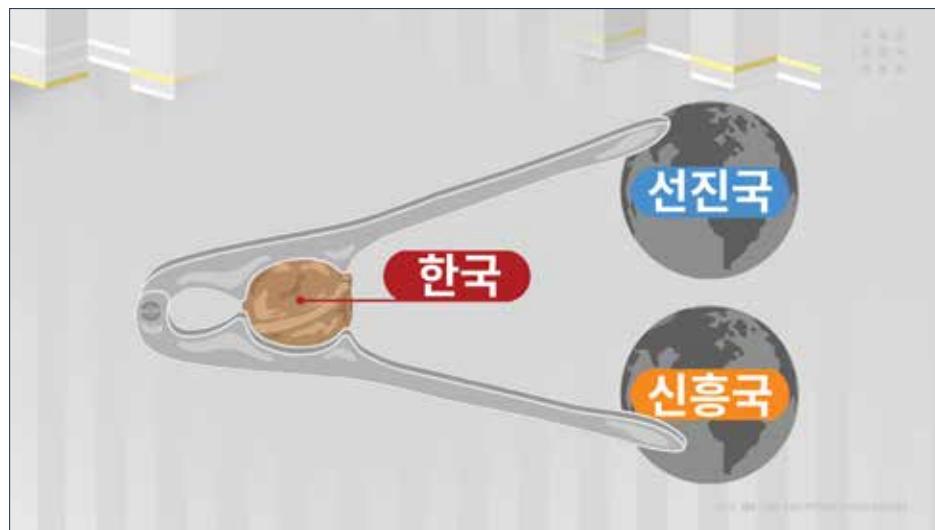
정부의 계획 아래  
수출 주도형으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는  
전세계적인 저성장 추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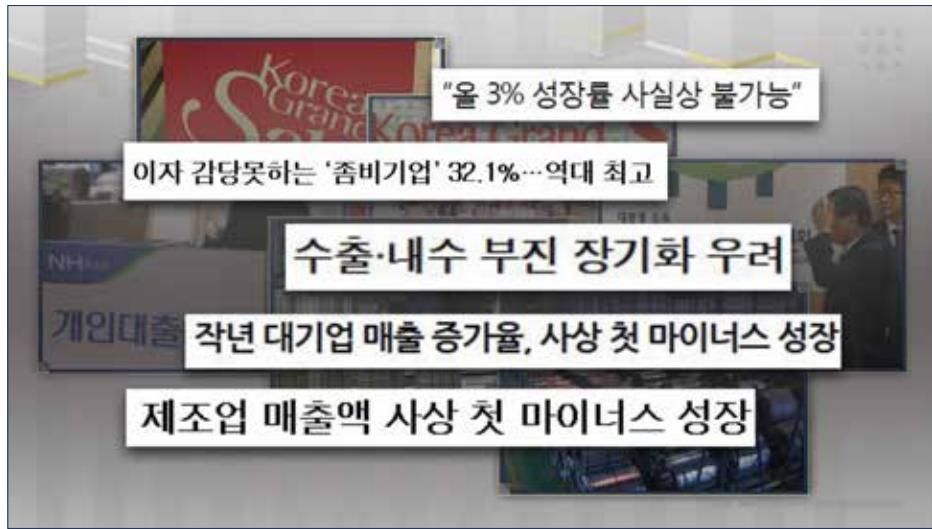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은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3만 달러의 고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력업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보니까  
글로벌 시가총액 5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한국 기업이  
3개로 줄어든 반면,  
중국은 계속 늘어 46개나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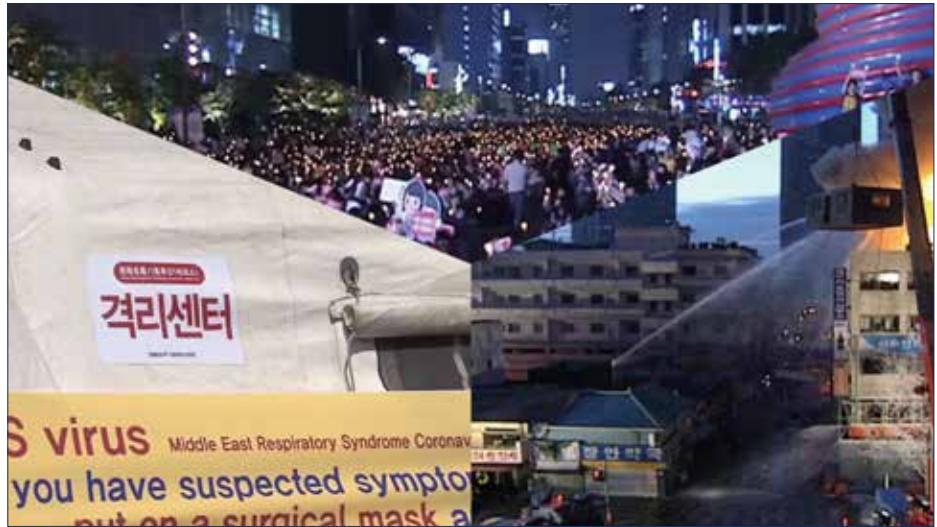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는 사이  
경제체질은 신흥국인데  
벌써 선진국처럼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버렸습니다.



정부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갖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의 파고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로 민주화는 됐지만  
정부의 투명성은 하락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FTA 협상 당시 촛불집회나,  
메르스 사태 등에서 나타난 혼란상은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 없이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모습이  
혼란을 부채질한 예입니다.



셋째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졌습니다.

원전 건설이나  
대규모 국토개발 사업,  
이에 따른 환경보호 문제 등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정권들이  
임기 내에 성과를 보겠다며  
단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반복하면서  
중장기적 연속성을 미흡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과거의 성장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전환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산업화의 바탕인  
기술과 자본은 모방할 수 있었지만  
민주화의 근본인  
제도와 규범, 타협과 절제의 문화가  
자리잡기에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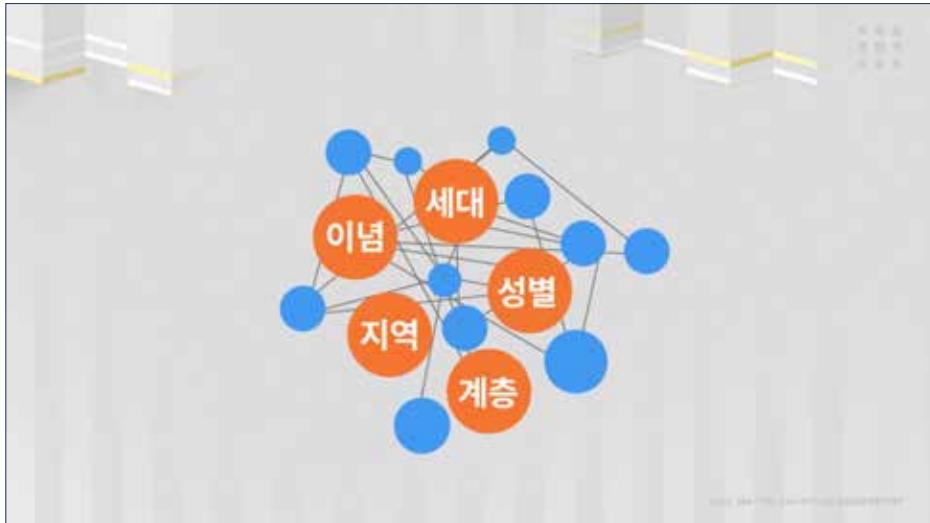


유럽은 한국  
금모으기를 본 받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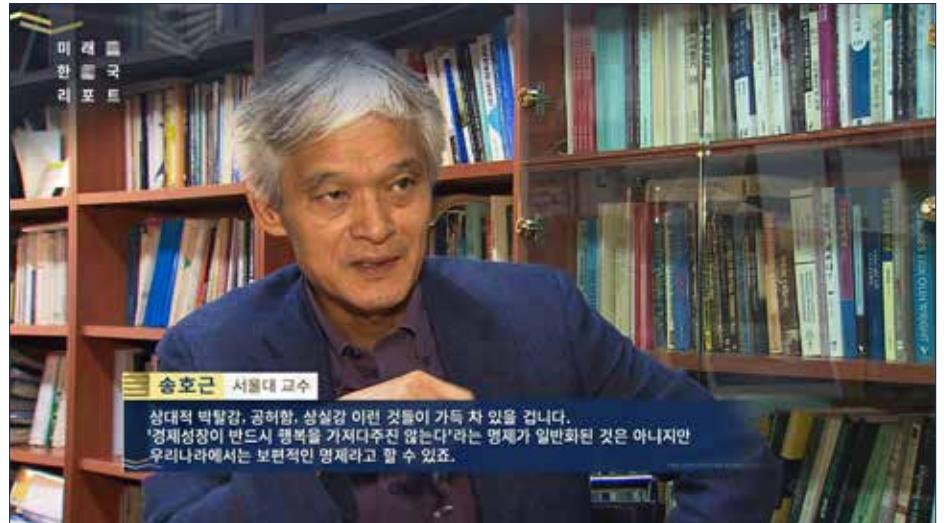
붉은 악마가 월드컵을  
진정한 축제로 만들었다

기름띠에 맞선  
희망의 인간띠

외환위기 때의 금 모으기 운동이나,  
2002년 월드컵 때의 거리응원,  
태안 기름유출 사고 이후 보여준  
자원봉사 행렬은  
우리 국민의 단합심을 보여준 좋은 예지만  
단발성에 그칠 뿐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사회적 갈등은  
계층과 세대, 지역과 성별, 이념 등으로  
더욱 복잡하게 얹혀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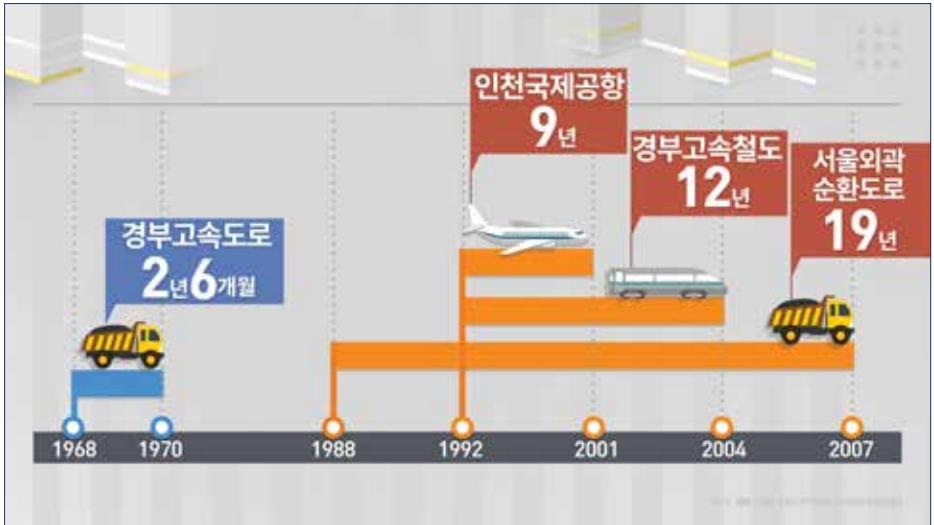
#### # 송호근 / 서울대 교수

“상대적 박탈감, 공허함, 상실감이 가득 차 있다.  
경제성장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주진 않는다는 명제가 일반화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인 명제다.”



## # 이재열 / 서울대 교수

“웬만큼 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 규칙대로 했다가는 손해를 봤다는 과거로부터의 경험에서 오는 불신,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서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미래를 향한 불안, 즉 불만, 불신, 불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갈등 속에서  
효율 만능의 정부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2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었지만  
이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서울외곽순환도로는  
19년이나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얹혀  
횡단보도 하나 짓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과 북창동 상권을  
마주하고 있는 남대문로입니다.

8차선 도로의 양쪽 끝 횡단보도가  
400미터나 떨어져 있다 보니  
시민들의 불편이 커  
중간에 횡단보도를 긋는 애이  
수년째 건의돼왔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장사 접어야 할 판이라며  
횡단보도를 결사반대하는  
지하상가 상인들과  
만들어달라는 지상 상인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정번용 / 남대문지하상가 상인연합대표  
“횡단보도 생기면  
지하상가 상인 80-90%는 망한다고 봐야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 박형재 /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차량보다 보행자 위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거 같은데요?”

심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뉴타운 사업을 계기로  
 서울시는 3년전  
 갈등관리관제도를 도입했는데,  
 협상과 조정, 중재는  
 여전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 홍수정 /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대화-협상-조정 안되면 법원의 순서로 가야하는데  
 한국은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순서적으로 조금 잘못됐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갈등 관리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갈등을 분석해봤더니  
새로 발생한 건수는  
매년 비슷비슷했지만  
해결이 안 돼 누적된 건수는  
1990년대 연간 50건 정도에서  
2000년대 중후반에는  
80에서 100건으로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갈등이 한번 발생하면  
타협점을 찾지 못해  
장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층 사다리가 무너지면서  
사회적 역동성이 사라졌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이를 뒷받침한 교육열은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요즘 ‘강남에서 용 난다.’는 말로 바뀌었고,  
 교육이 부와 계층이  
 대물림되는 통로로 전락했습니다.



부족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한번 실패한 사람은 좀처럼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환기의 한복판에 있는 한국 사회,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앞으로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각각의 정부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정 목표를 수립하고  
다양한 개혁을 시도해 왔지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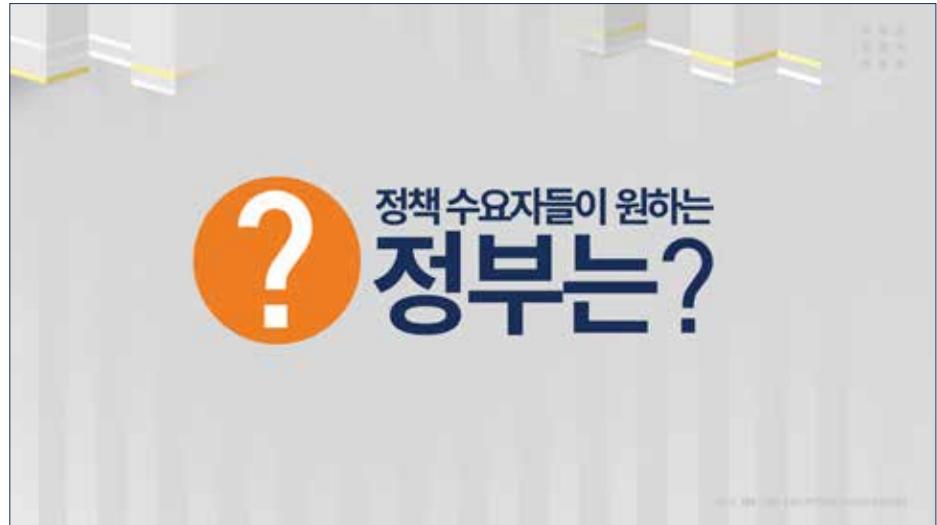
## # 윤증현 /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해야 한다.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거나 포퓰리즘에 휘둘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금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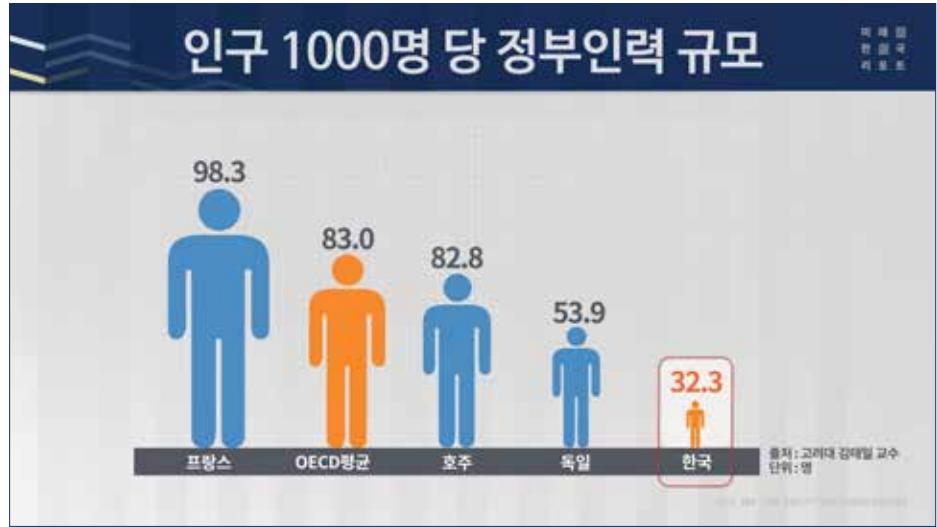


## # 김황식 / 전 총리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정책이 설정이 안되고 있다.  
계승이 안되고 단절되면 국력낭비, 국민통합 저해, 국제관계에서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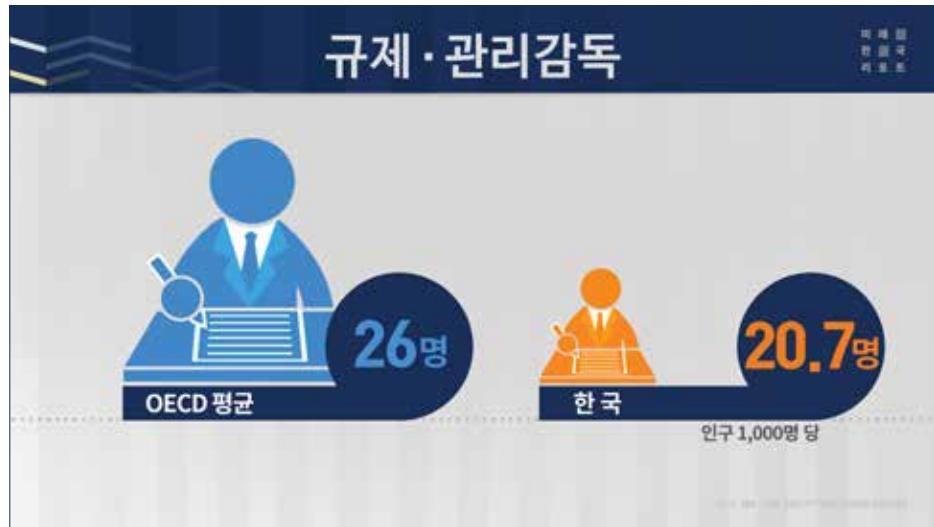
개발경제시대 관성대로  
정부의 역할을 정의하지 말고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둬야 할지  
원점에서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무원의 인력 배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는 인구 천 명당 32명으로  
OECD 평균 83명의  
40%에 불과할 정도로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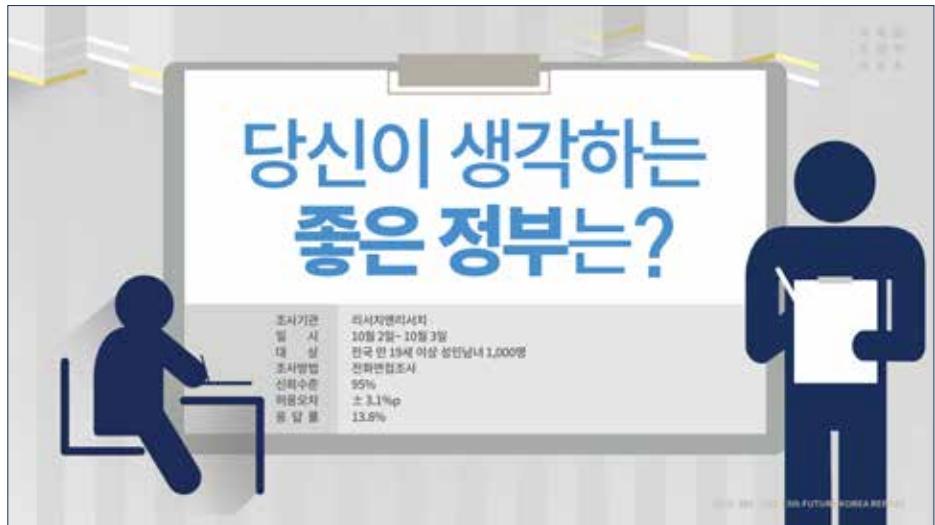
언뜻 보면 작고 효율적인 정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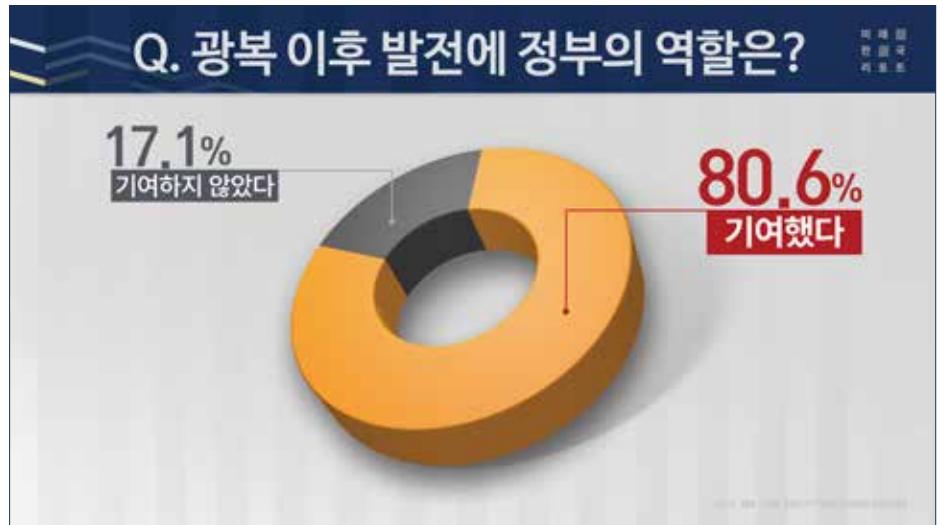
하지만 인력의 대부분이  
규제나 관리 감독 영역에  
집중돼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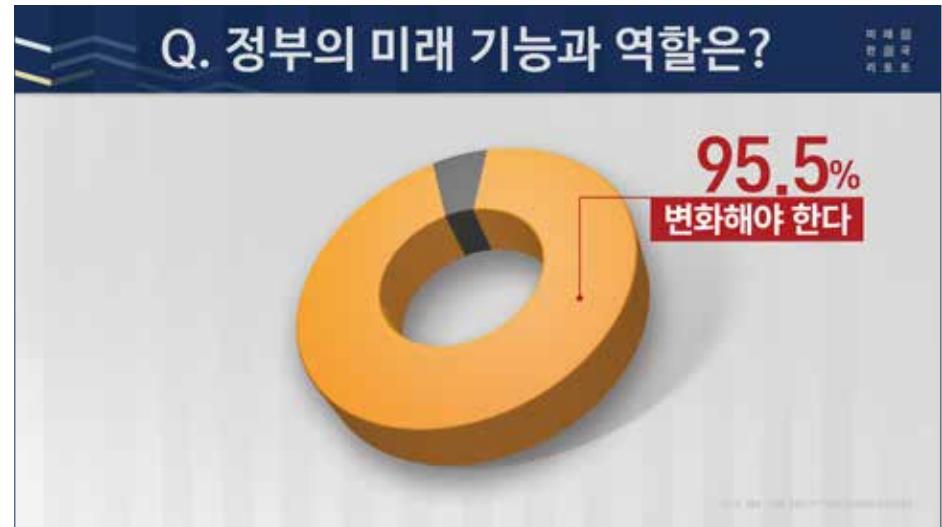
반면 복지나 공공 서비스 분야는  
OECD 평균의 22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형편없이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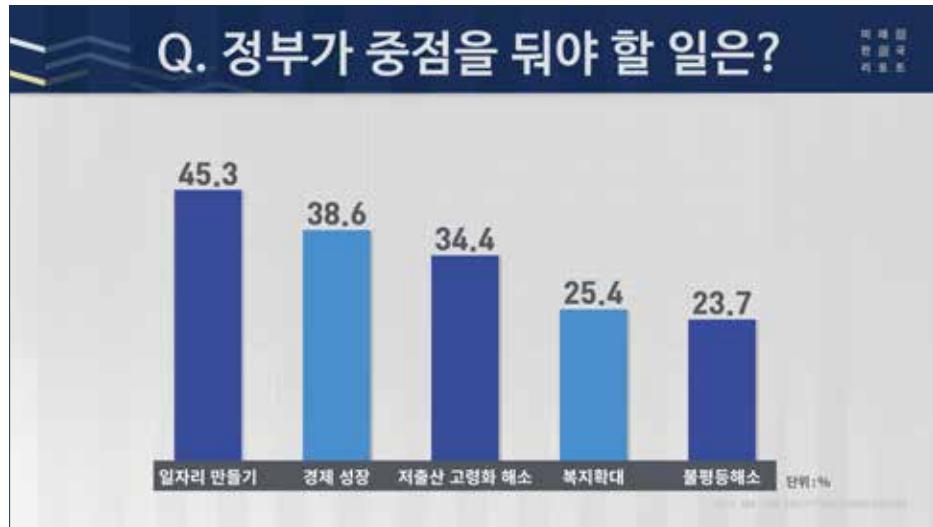
SBS가  
'좋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80%가  
광복 이후 발전상에  
정부가 기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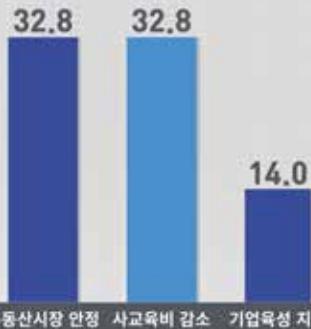


지금까지의 정부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95%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과제로는  
일자리 만들기, 경제성장 등  
'경제' 과제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사회복지 확대나 불평등 해소와 같은  
격차 문제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 Q. 민간에 맡겨야 할 일은?



반면  
 부동산 시장 안정, 사교육 문제 등은  
 정부가 직접 수행했을 때  
 효과가 좋지 않다면  
 정부개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 Q. 민간에 맡겨야 할 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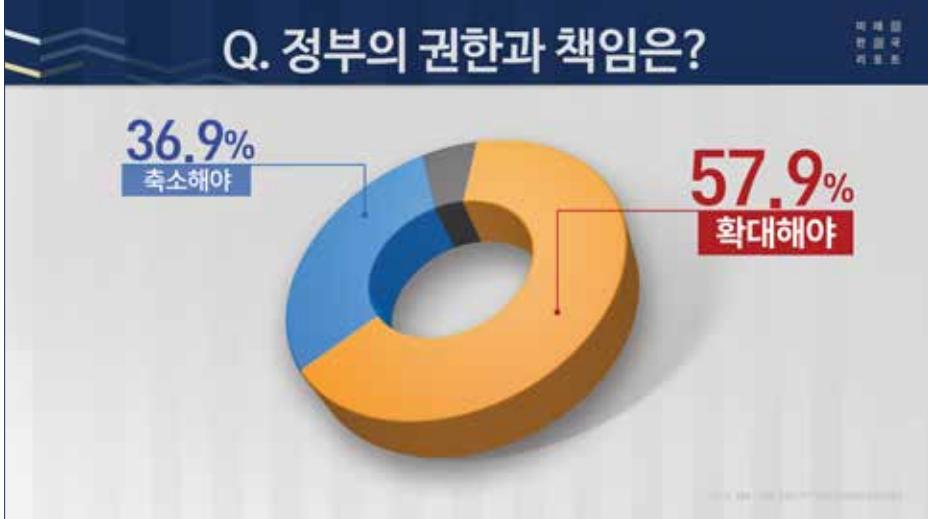


그런데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경제 성장 등은  
 정부가 실행하면  
 효과가 좋지 않을 분야에도  
 동시에 상위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즉 국민들 마음에는  
 정부가 이런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는 기대와  
 그동안의 부진한 성과에 대한 실망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에는  
공직자 부패와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 등의  
순으로 꼽혔습니다.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지금보다 확대돼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더니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해,  
우리 국민은 여전히  
정부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그에 걸맞는 책임도 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 재도약하나 쇠퇴하나

한국이  
경쟁력을 다시 응집해  
전환기의 위기를 넘어  
재도약할 것인가,  
그렇지 못하고 쇠퇴할 것인가  
역사적 기로에 섰습니다.

SBS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연구한 좋은 정부의 조건,  
좋은 정부 탄생을 막는  
제도적 문제에 대해  
서울대 김병연 교수의 분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FUTURE KOREA REPORT

## Presentation 2 **‘제도의 함정’을 넘어서**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미래  
한국  
리포트

FUTURE KOREA REPORT  
2015 · SBS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부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만들기, 기업 육성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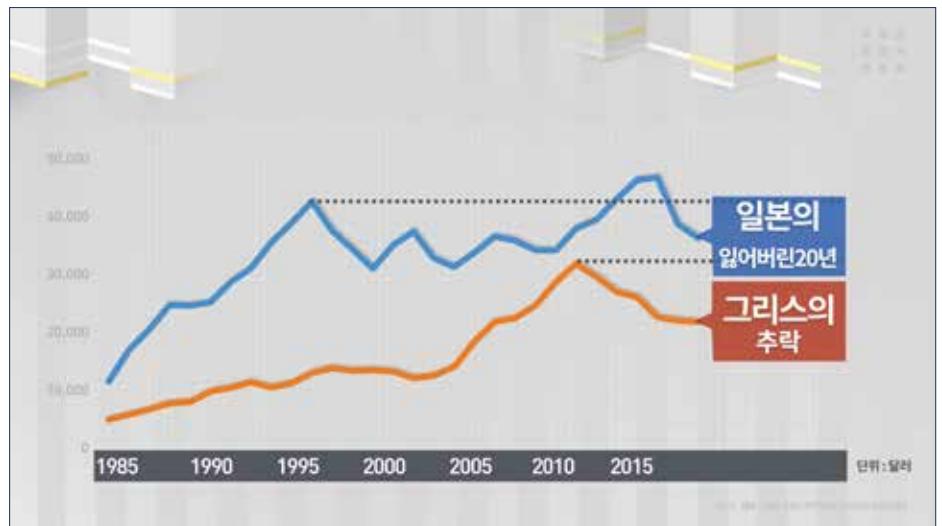
그러나 한국 경제가  
다시 4~5% 이상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2%대에서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니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인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전 고속성장에 익숙한 사람들은  
지금 침체는 일시적인 것이며,  
다시 경기가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국가의 사례를 보면 경제가 좋아진 경우도 있지만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심지어 경제가 붕괴된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소련은  
사회주의 초기에 고속성장을 하다가  
성장이 둔화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 7000달러를 넘지 못하고  
체제가 붕괴했습니다.



그리스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잠깐 넘었다가  
2만 달러대로 추락했습니다.  
일본은 4만 달러대를 넘어섰다가  
3만 달러대에 20년 이상 머물고 있습니다.

	일본	4만 달러 국가
연구자수 (백만명 당)	5193	4204
대학 진학률 (%)	55.34	56.4
국민소득 대비 투자(%)	22.23	21.2

그런데 일본은  
경제 성장론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경제성장 요인  
즉 기술, 투자, 교육 모든 면에서  
오히려 4만 달러를 넘어선 국가보다 앞서거나 비슷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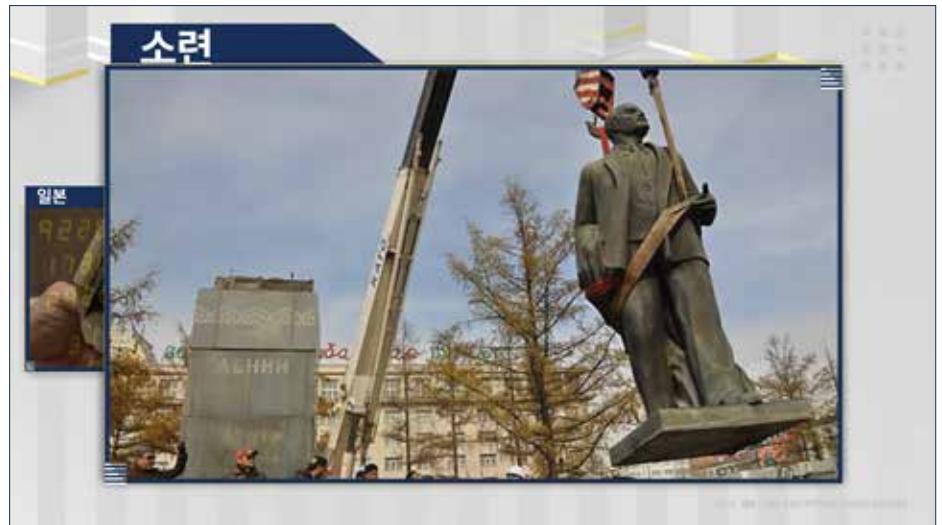
	일본	4만 달러 국가
연구자수 (백만명 당)	5193	1000명 ↑
대학 진학률 (%)	55.34	≒ 56.4
국민소득 대비 투자(%)	22.23	1%p ↑ 21.2 6만 달러 수준

백만 명당 연구자 수는 일본이 5천2백 명으로  
1인당 소득 4만 달러를 넘어선 국가 평균보다  
1000명 가량 많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비슷하고  
국민소득 대비 투자도 1% 포인트 정도 더 높습니다.

사실 이 정도 수치이면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6만 달러를 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20년 동안 경제침체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는 왜 경제위기에 빠졌고  
소련은 왜 붕괴했을까요?  
이 세 국가의 공통점은 있을까요?



소련 경제의 붕괴 이유는 설명이 용이합니다.  
사회주의 때문이지요.  
즉, 제도 문제입니다.

사유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투자와 노동의 동기가 유발되지 않습니다.  
계획 경제시스템이 복잡해진 경제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인 그리스와 일본이  
위기 혹은 침체에 빠진 것도  
소련과 양태는 다르지만  
결국은 제도 문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도는 게임의 규칙과 같은 것입니다.  
규칙이 잘못되면 경기가 엉망이 됩니다.  
선수들은 열심히 경기하지 않고,  
심판을 매수하거나 반칙을 해서  
이기려 할 것입니다.

제도 중에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권과 관련된 제도와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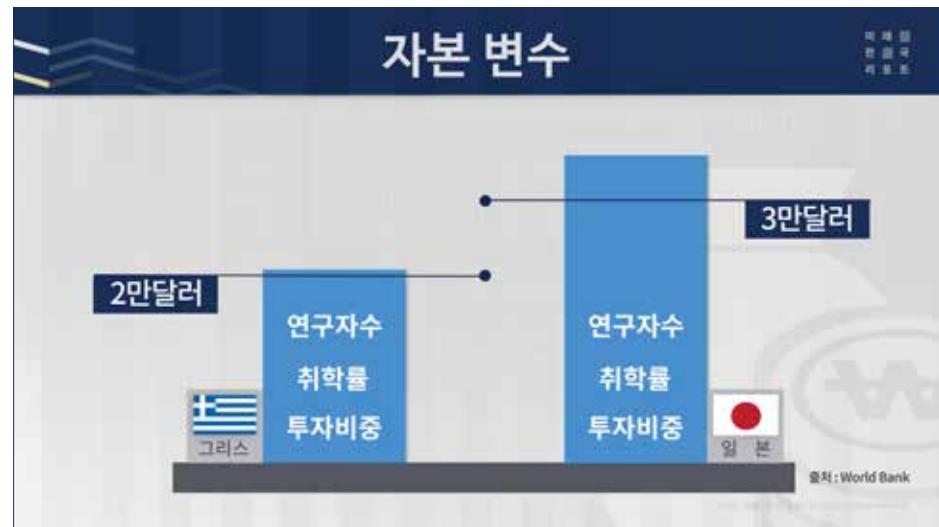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고,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부패가 심하고,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못하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거나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패를 이용하여 돈을 벌고,  
문제가 생기면  
뇌물을 주고 해결할 것입니다.  
  
이런 비생산적인 활동이 많아지면  
생산에 쓰는 시간과 자원이 줄기 때문에  
경제는 어려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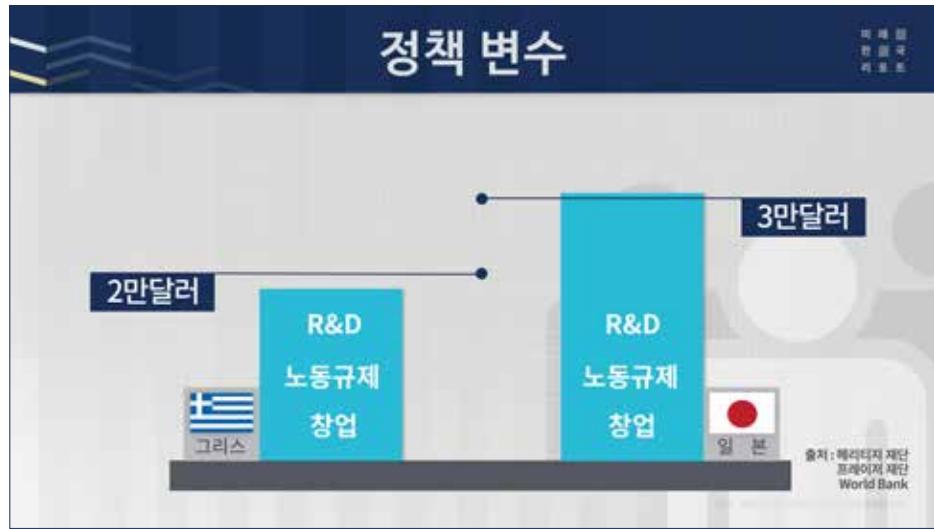
경제활동의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료의 질이 낮고  
시장제도가 잘 작동되지 않으면,  
곳곳에 마찰과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관료주의, 정부 부처 간 비협조,  
계약 이행의 어려움이 그 예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정작 더 중요한 생산 활동은 하지 못합니다.



사실 최근 경제학에서는 성장 요인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 교육, 기술 같은 자본 변수뿐만 아니라 제도, 정책을 포함한 종합예술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는 국가발전에도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일본과 그리스의 경우를 봅시다.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연구자 수에서, 그리스는 2만 달러대 평균과 유사하며, 일본은 3만 달러대 평균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R&D 같은 정책 관련 변수를 보면,  
그리스는 평균보다 낮으며  
일본은 유사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제도 관련 변수입니다.  
부패와 법질서 같은 제도 관련 변수에서는  
그리스는 평균에 비해 크게 낮으며,  
일본도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본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시내에서  
좁은 산길을 따라  
차로 1시간 반 남짓 달리면  
‘오보로오’ 다리가 나옵니다.

길이 293m, 높이 70m의 이 다리를 짓는데  
43억 엔, 우리 돈으로 430억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도 다리를 지나는 차량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건설 당시에는  
하루 평균 2천 대의 차량이  
이 다리를 지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통량은  
예측치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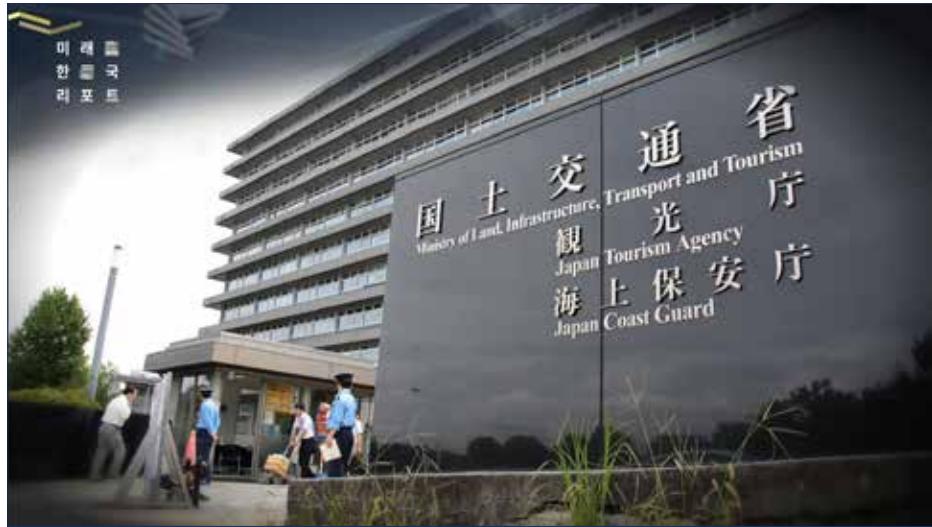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자민당 의원 고가 마코토가  
지역구 건설업자들로부터 후원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겁니다.

# 바바 카오루 / 주민  
“아무나 이렇게 큰 다리는 못 만들죠.  
그래서 마코토 다리, 마코토 다리라고 해요.”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족의원과 관료,  
토건업자가 유착하는  
이른바 ‘철의 삼각형’이 빚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삼각 동맹을 통해서  
토건업자들은  
정치현금과 선거지원의 대가로  
정치권으로부터  
공공사업 유치와 보조금, 세제혜택을  
얻어냈습니다.



관료들도  
퇴직 후 낙하산 자리를 보장받는 대신  
인허가 등에서  
업자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었습니다.

# 고가 시게아키 / 전 통상산업성 관료  
“철의 삼각형을 지킬 때, 3자가 잘 협조하면  
너무나 쉽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호황이던 시절에는  
이런 ‘철의 삼각형’이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버블이 깨진 90년대 이후에도  
이런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비효율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90년대 9차례에 걸쳐  
124조 엔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이 돈 중 상당수가  
‘철의 삼각형’에 갇혀  
지역 토건사업에 투입됐습니다.

실제로 1994년  
일본 내 콘크리트 제조량은  
9천160만 톤으로  
국토 면적이 25배나 넓은  
미국의 7천790만 톤보다  
18%나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와 감시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 # 고지마 켄지 / 일본 옴부즈맨 대표간사

“(일본에서)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진 건 2001년입니다.  
정보가 없으면 문제를 제대로 알 수 없어서  
시민운동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정된 재정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서  
일본의 90년대 연평균 성장률은  
1.2%에 그쳤습니다.

결국, 지난 1981년  
GDP의 55.4%였던  
국가부채 규모는  
97년 GDP의 100%를 넘어선 데 이어  
2009년에는 200%마저 돌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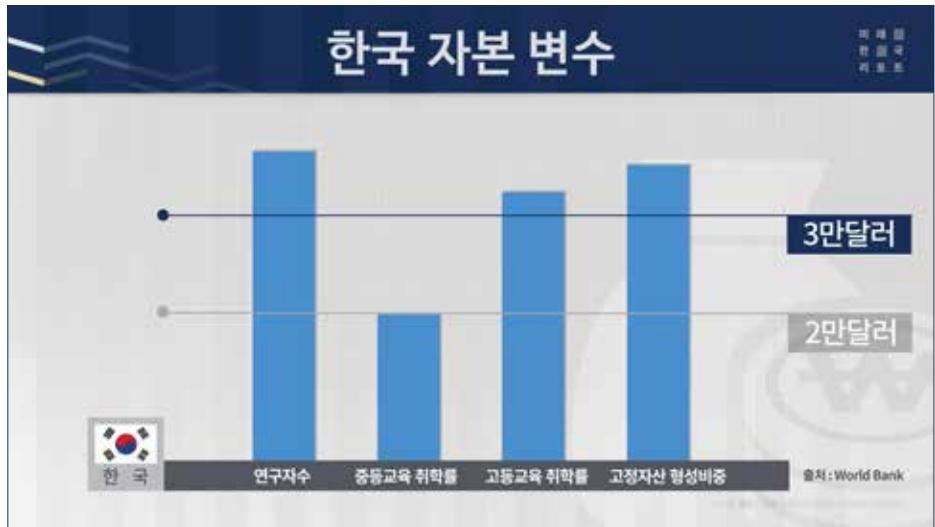


그런데도  
200년 만에 한 번 올까 한  
대홍수에 대비한다며  
12조 억 엔을 들여 슈퍼제방을 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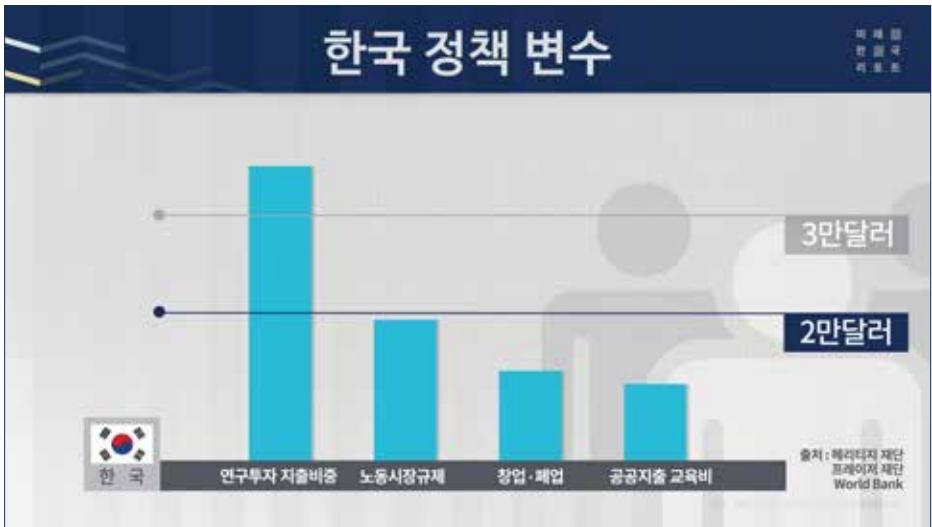
바다를 매립해  
인공섬을 지어놓고도  
입주자를 찾지 못해 땅을 놀리는 등  
‘철의 삼각형’은 오늘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 오구마 에이지 / 게이오대 역사사회학 교수  
“정부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정치적 지식을 넓히는 교육을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도의 함정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본 사회는 지난 20년의 아픈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2만 달러대인 한국은  
투자, 연구자수와 같은  
자본 관련 변수 수준이  
이미 3만 달러대를 넘어섰습니다.  
4개 지표 가운데 3개에서 한국이 더 높습니다.



정책 관련 변수는  
3만 달러대 국가보다 낮습니다.  
즉 연구비 지출 비중은  
3만 달러대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나머지 변수들은 낮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규제는  
2만 달러대 국가와 비슷하지만,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얼마나 쉬운지를 측정하는 지표들은  
2만 달러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고,  
공공지출 교육비 수준 역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정책 부족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부패 등 제도 관련 변수 수준은  
3만 달러대 뿐 아니라  
2만 달러대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사실 한국의 제도 수준은  
1만 달러대 국가와 비슷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선 추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제도 변수는 낙후돼 있을 뿐만 아니라  
1만 달러 때와 2만 달러 때를 비교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패와 관료의 질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이 제도의 함정에 빠져  
여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도의 함정 때문에 경제성장도 어렵고  
국가발전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순위로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15,000달러를 넘는  
31개국 가운데  
한국 제도의 질은 주로  
20위권 이하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부패의 측면에서 한국은 최하위권입니다.  
관료의 질도 개선 추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과 1인당 소득이 비슷한 나라와  
비교해도 문제가 드러납니다.  
체코, 포르투갈, 뉴질랜드가 비교 대상 국가인데  
2010년 소득 기준으로  
체코는 우리 보다 6,000달러 정도 낮고  
포르투갈은 비슷하며  
뉴질랜드는 1만 달러 가량 더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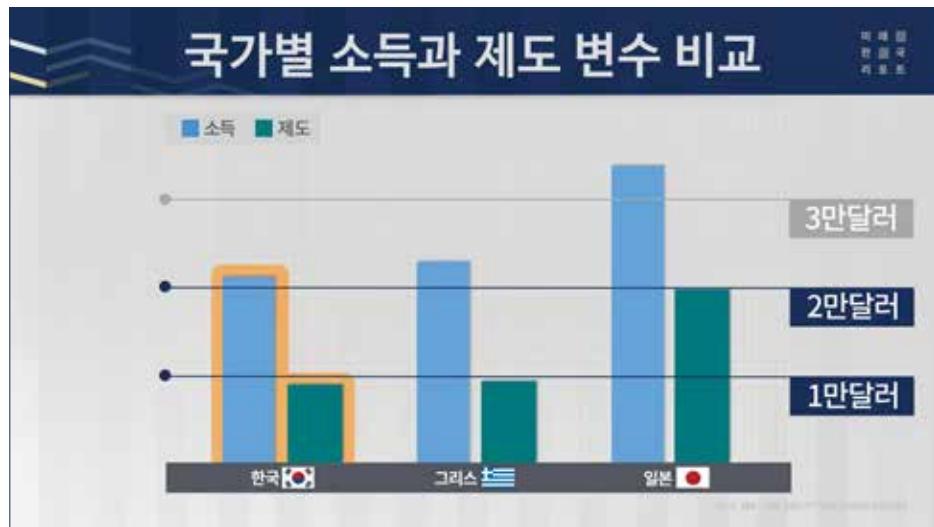


이 국가들과 2000년대 이후 평균값을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부패와 법질서, 관료의 질,  
사법 독립성과 같은 제도 수준이  
우리보다 소득이 낮은 체코와 비슷합니다.  
포르투갈보다는 뒤쳐져 있고  
뉴질랜드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제도가 한국의 성장과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의 개선 없이는  
일본의 잊어버린 20년이  
우리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경제 문제가 단지 경기부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국, 그리스, 일본은  
놀랄 만큼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도 관련 변수의 질이  
소득수준에 비해 현격히 낮다는 것입니다.  
제도 면에서는  
자기 나라 보다 소득이 1만 달러 정도  
낮은 국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민소득은  
가장 낮은 변수 수준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구속적 제약입니다.  
즉, 다른 변수들이 높아지더라도  
일부 변수들이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국민소득은 제일 낮은 변수 수준으로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제도 관련 변수가 3만 달러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본변수가 3만 달러 수준이 되더라도 우리 소득을 아래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제도 수준이 낙후되었다는 것은  
핸드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본 관련 변수인  
엑셀레이터를 강하게 밟더라도  
차가 속력을 낼 수 없습니다.  
한국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도의 함정을 넘어서

부패  
관료의 질  
사법부 독립성  
법질서

우리의 낙후된 제도는  
부패, 관료의 질, 사법부 독립성,  
법질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만들어지더라도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도의 함정을 넘어서



경제 성장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서  
제도의 함정과 정책의 부족에서 벗어나는 길이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의 핵심이며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 ‘효율’에서 ‘역량’으로

Presentation 3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미래  
한국  
리포트

FUTURE KOREA REPORT  
2015 · SBS



안녕하십니까.  
앞선 발표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정부 모델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 부족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 정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 정책,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부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실행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책과정을 단순화하면  
어젠다세팅, 정책구성, 정책결정,  
정책실행, 정책평가 등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젠다세팅, 정책구성, 정책결정은  
정책결정과정에 해당하고,  
정책실행과 정책평가는  
정책운용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결정력과 정책운용력을  
합친 것이 정책역량입니다.

따라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 운용의 정책 과정 전체가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정책결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효율성과  
보편적인 복지와 공공선을 증진시키는  
공익성이 좋아야 합니다.

또 정책운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인 조정성과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인  
실행성이 필요합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공익성, 조정성, 실행성 등 네 가지 속성들이  
어떠한 수준과 상태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특성들이 모여  
정책역량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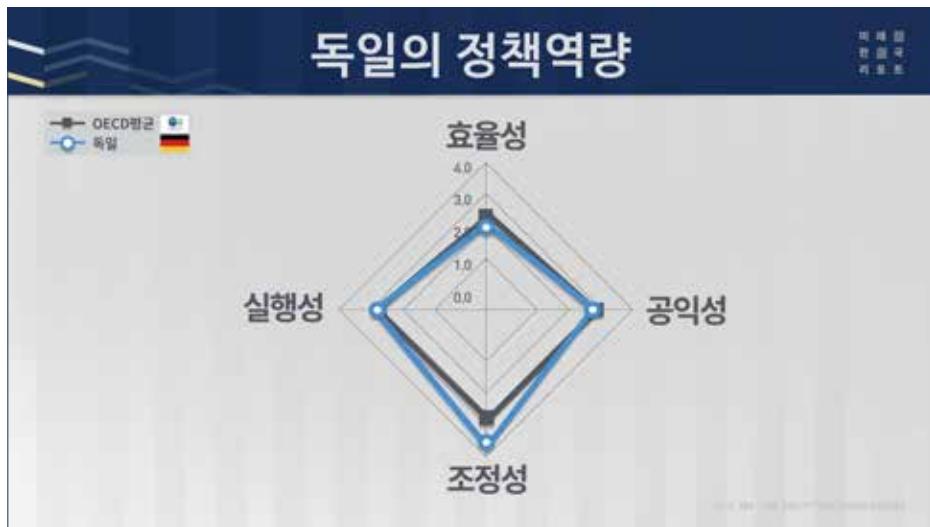


SBS와 서울대 사회발전 연구소는  
OECD 국가들의 정책역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4개 속성 가운데  
우리나라가 비교적 높은 건 실행성입니다.  
비교대상 31개 나라 가운데 8번짼니다.  
그 다음은 효율성으로 14됩니다.  
그러나 조정성과 공익성의 순위는  
높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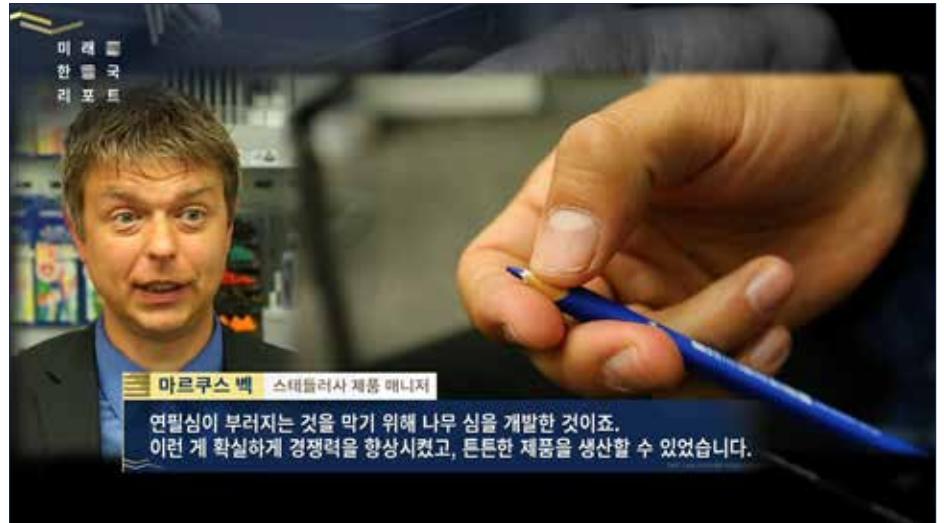
조정성은 23위,  
특히 공익성은 31개국 가운데 30위였습니다.



경제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  
유럽의 강국 독일은 어떨까요.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뿐  
다른 지표는 대체로 평균이거나 더 높았습니다.  
특히 높은 조정성이 돋보였습니다.

여기서 높은 정책역량이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지,  
독일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독일 남부의 도시 뉘伦베르크.

이곳엔 180년 된 연필 회사가 있습니다.

2천명의 직원이  
매년 4억 6천만 자루의 연필을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 마르쿠스 벤 / 스테들러사 제품 매니저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필심이 부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무심을 개발한 것이죠.  
이런 게 확실하게 경쟁력을 향상시켰고,  
튼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최상위권의 점유율을 갖는  
이른바 히든 챔피언 기업,

독일에는 이런 기업이 천 3백 개가 넘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 중견 기업이  
독일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독일 근로자 1570만명이 중소기업에서 일합니다.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90% 수준이라  
생활하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 디트마흐 베르너 / 중소기업 16년 근무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는 게 절대  
낮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가운데 일부 분야는 대기업과  
똑같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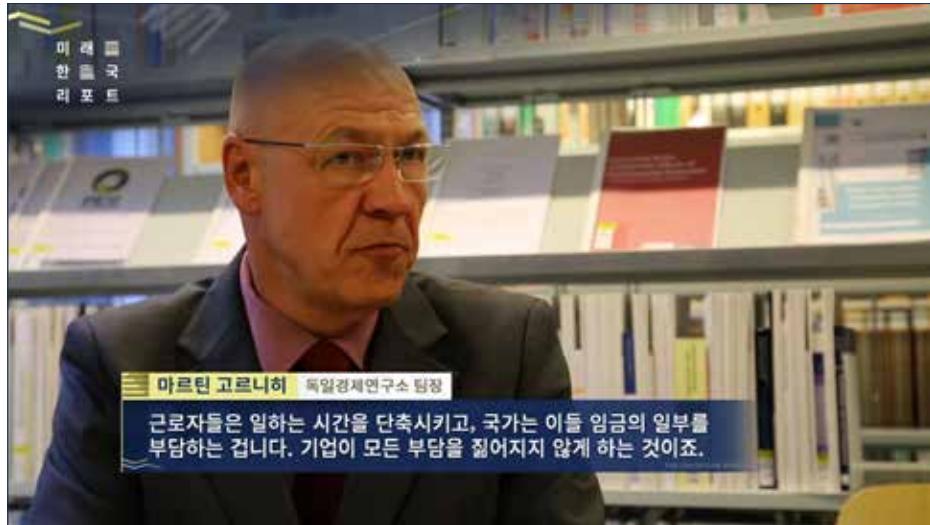


오랫동안 이어진 가족 경영과  
マイ스터라고 불리는  
독특한 기술 인력 양성 시스템,  
그리고 정부가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2천8년 금융위기,  
메르켈 정부는 야당과 기업, 근로자들과  
대타협을 이뤄냈습니다.

임금 삭감-고용 유지-정부 지원 ‘대타협’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는 대신  
기업은 고용을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에 50억 유로,  
우리 돈 7조 2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숙련된 인력이 그대로 남게 돼  
빠른 경제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 # 마르틴 고르니히 / 독일 경제연구소 팀장

“겨울철에는 추워서 집을 짓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때 모든 근로자들을 해고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들은 일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국가는 이들 임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겁니다.  
기업이 모든 부담을 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독일은 지역 특성이 강한  
연방제 국입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살려  
전국 곳곳에 산업별 클러스터를 만들었고,  
이를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은 전세계 물류성과지수 1위,  
유럽 물동량의 4분의 1을 책임지는  
물류 대국이 됐습니다.

## # 에르나 뮐러 / 스테들러사 홍보팀장

“독일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류 센터를 통해 직접  
독일 뿐 아니라 유럽 각지 직매장으로 옮겨집니다.  
세계 전 지역으로 배송됩니다.”

독일은 경제 관련 법안을 만들 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경기 변화 시 완충기능 유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수십 년째 일관 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 마르크 에버스 / 독일 연방상공회의소 이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과 달리 행정절차로 인한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법무팀이나 인사팀이 없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모든 법률은, 만들어지기 전에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검토돼야 합니다.”

일자리를 둘러싼 당사자 간의 합의를 끌어내고 지역별, 기업규모별 균형을 맞춰내는 능력, 정권이 바뀌어도 핵심 가치는 이어가는 안정성이 중소기업 강국, 경제 대국의 바탕이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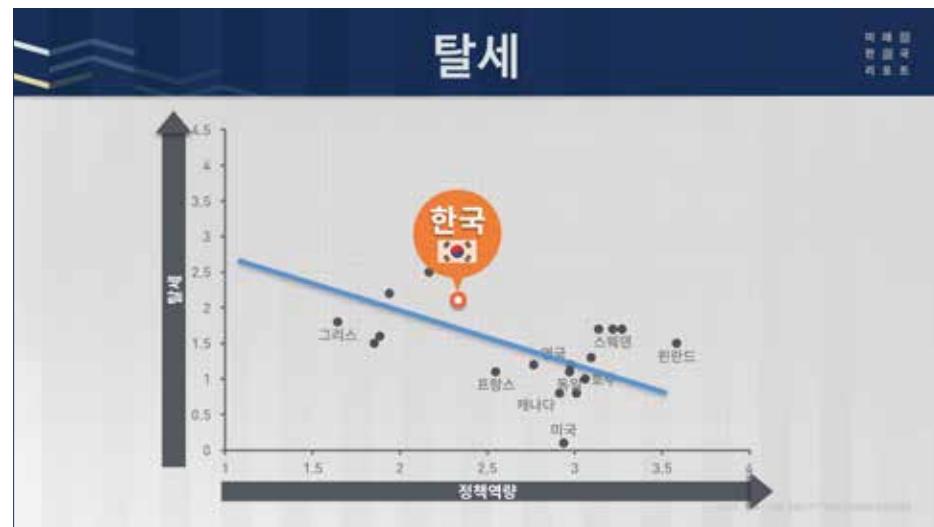


독일 사례에서 보듯이  
높은 정책역량은 궁극적으로  
경제성장 지속, 재정건전성 확보,  
사회의 질 향상과 같은 성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통계 분석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이 그림의 가로축은 정책 역량을,  
세로축은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의미합니다.

정책역량이 높은 국가일수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적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번 그림은 정책역량과  
탈세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책역량이 높은 국가일수록  
조세공정성이 높고  
재정 확보 능력이 뛰어나  
탈세가 더 어렵게 됩니다.



정책역량과 사회의 질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과 함께  
유럽의 양대 강국인 프랑스는 어떨까요.

실행성과 공익성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효율성과 조정성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낮은 조정성 탓에  
사회집단들의 갈등은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개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상 보시겠습니다.



한해 7백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파리의 상징 에펠탑.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이곳이  
지난 4월 하루 문을 닫았습니다.

#### # 미국 관광객

“파리의 아름다운 에펠탑을 보기 위해 앉는데  
못 올라간다니 말도 안 된다.”

에펠탑을 관리하는  
파리시의 공기업이 파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공영 라디오 방송 <라디오 프랑스>도 구조조정에 반대해  
한달 동안 음악만 내보내며 최장기 방송 파업을 벌였습니다.

#### # 라디오 멘트

“고용보장을 위한 노조의 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모든 정규 방송을 중단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제사 노조와 철도 노조,  
그리고 보건 노조, 교원 노조 등이  
파업을 벌였고 시위도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공공 노조가  
잇달아 파업에 들어간 원인은  
재정 긴축에 따른 구조조정이었습니다.



2000년 이후  
재정 적자가 계속된 프랑스는  
올해 유럽연합으로부터  
2017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줄이라는 권고를 받았고  
이에따라 앞으로 3년동안  
65조원 규모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금 생활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 # 완다 드라제 / 61세, 전직 은행원

“지금 상태라면 국고가 바닥날 것 같아서 걱정이다.  
직접 노후를 준비하던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프랑스인들은  
6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  
유럽 국가들 중  
연금을 받는 기간이 가장 길니다.



여기에 연금 재정을 분담해야 할  
청년세대의 실업률까지 높아지면서  
연금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 비르지니 바레 / 연금공단 대외협력부장

“분담금을 본인이 내지만 은퇴 후 받는 돈은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충당한다.  
그게 바로 세대 간 연대를 통한 재분배다.”

프랑스 정부는  
1993년부터 연금 개혁을 여러번 시도했지만  
부분적인 수정에 그쳤을 뿐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정부는  
노동이나 복지 같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혁을 시도하면서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해진 의회는  
중재 역할을 못했고,  
갈등은 격렬한 시위와 대규모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 # 막심 라데크 / OECD 고용·복지 과장

“프랑스인들은 만족하지 못하면 거리로 나가거나,  
시장, 국회의원에게 찾아가 압력을 행사하고,  
그런 일들이 개혁을 후퇴시킨다.”

#### # 장미셸 무루방 / 프랑스노동총동맹(CFDT) 사무총장

“근로자 분담금은 올리고 연금은 줄이는  
그런 개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안전하고 친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것을 테이블에 내놓고 협상해야 한다.”

결국 사회적 갈등으로 재정적자가 악화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투자도 이뤄지지 못하면서  
프랑스 경제의 활력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웃나라 일본과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를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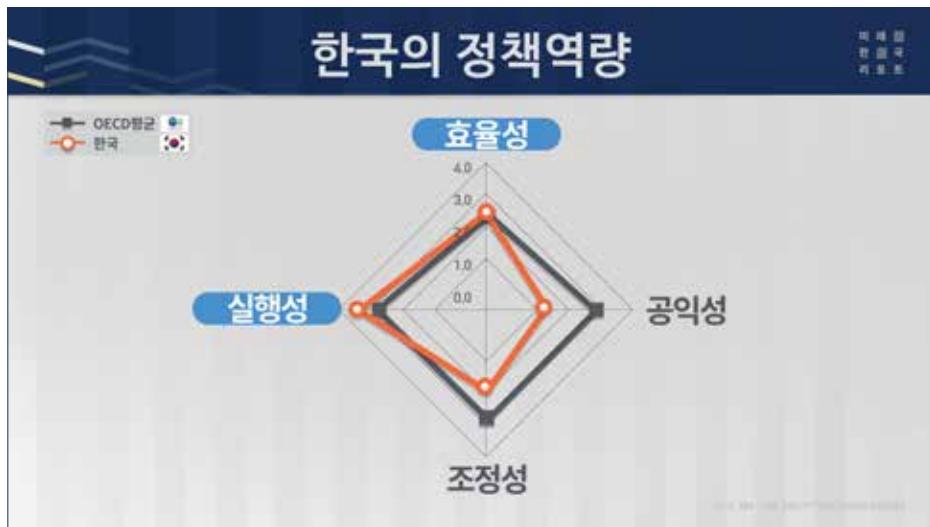


일본은 조정성과 실행성이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에 속합니다.  
공익성도 평균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효율성이  
OECD 고소득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



호주는 조정성이 평균 수준이었고,  
효율성과 실행성, 공익성 3개 지표가  
모두 상위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의 정책역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한국정부의 효율성, 공익성, 조정성, 실행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행성과 효율성은 양호합니다. 이런 특성이 경제 개발 시대에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광복 이후 70년 동안  
한국이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강한 정부가 중심이 되어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발전국가모델은  
과거 한국사회에 최적화된  
좋은 정부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과거 정부가 주도한 효율성 일변도의 정책들은  
오히려 미래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정부의 정책역량은  
공익성과 조정성에서  
OECD 국가들 가운데  
하위에 위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때문에 정책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  
갈등이 격화되고  
공공성을 위한 자원 배분이 부족하다보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정책역량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정부에는 수평적 조정 경험의 부재,  
부처 이기주의, 단기적 성과 집착,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의 불투명성,  
정책의 지속성 부족 등과 같은  
과거 발전국가 모델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선진국에서 성공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유사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은  
정부의 정책역량에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미래에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난제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효율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효율에서 역량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책역량이야말로

전환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정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UTURE KOREA REPORT

# Presentation 4

## 좋은 정부의 조건

장덕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미래  
한국  
리포트

FUTURE KOREA REPORT

2015 · SBS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의 발표를 통해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한국이  
전환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함정을 뛰어넘어야 하고,  
효율 위주에서 벗어나  
정책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 결정 과정을  
형성과 합의의 2단계로 나누어  
정책 형성 과정, 정책 합의 과정,  
정책 운용 과정의 단계별로  
구성 요소들의 변화에 따른  
정책 역량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정책형성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책이 특정 계층이나  
이익집단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공익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뚜렷한 패턴이 눈에 띕니다.



첫째는 시민의 감시수준이 높아지면  
정부의 공익 추구가 높아지고,  
시민의 감시 수준이 낮아지면  
공익 추구가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야말로  
사적 이익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보공개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정확하게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의 불신으로 인한  
정책 집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가장 좋은 해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조정력을 발휘할 때  
어떻게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1년여 전 성남지역은  
극심한 쓰레기 대란을 겪었습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된  
쓰레기 소각으로  
환경오염이 커지고 있다며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닷새 동안 쓰레기차 반입을 막았습니다.

주택가에는 쓰레기가 넘쳐났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감정인 격앙된 주민들과 소각장이  
맞닥뜨리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시 갈등관리관이  
주민협의체와 절충에 들어갔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분류되지 않은  
무단 쓰레기 반입에 대한  
감시를 늘리고,  
주민들에겐  
분리수거 망을 보급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홍보에  
나서기로 합의하면서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 # 주민

“주민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 이런 생각했다.  
쓰레기가 혐오가 아니라 우리 생활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이후 재활용품 배출과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각각 32%, 13%가 늘었고,  
생활폐기물 쓰레기는  
19%가 줄었습니다.

갈등을 불미스러운 일로 보지 않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발전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갈등 관리,  
미래 정부에 더 강하게 요구되는 역할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지표를 보시겠습니다.

2012년 세계경제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정책결정 투명성은  
2008년 44위에서 해가 갈수록 떨어져서  
2012년이 되면 133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투명성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모든 국민의 공익에 봉사하는 정책이  
만들어지기 점점 어려워지고  
사익이 개입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집니다.



많은 혈세가 투입된 어떤 정책이  
알고 보니 부실 투성이였다든가 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은  
이러한 투명성 하락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책합의 과정입니다.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바로 집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의회의 합의를 통해  
법을 만들어야 하고,  
의회에서도 여야 간 협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책합의 과정입니다.



그럼 정책합의 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실까요?



정부가 의회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의회에서도 여야 간 정책 대결을 벌이면서  
적정한 수준의 행정부 견제를 유지한다면  
정부의 독주는 줄어들고  
정책갈등 수준은 낮아집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의회의 행정부 견제 수준이  
낮은 경우를 보면  
정부의 정책독주 경향이 높아지고  
정책 갈등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헌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현실에서의 견제관계는  
의회 대 행정부의 구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부와 여당을 한편으로 하고  
야당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여야 대립의 구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의회의 견제기능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약화되기 일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정책적 견제는 약화되고  
정치적 견제만 강화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산심의기간 자체가 OECD 평균 85일에 훨씬 못 미치는 60일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240일, 캐나다, 독일, 덴마크는 120일 동안 심의합니다.



기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심의의 전문성도 문제입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교체율은 해마다 80%에 이릅니다.  
예결위원 배정이 전문성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효과적인 정책합의를 통해 침체를 딛고 성장을 이끌어낸 <호주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5살 딸을 혼자 키우는 로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센터링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싱글맘인 자신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복지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는 물론이고  
의료 지원과 세제 혜택까지 찾아다닐 필요 없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 서비스를  
센터링크 한 곳에서 지원받습니다.

#### # 로빈 브리튼 / 38세, 싱글맘

“싱글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를 센터링크 직원들이 알아서 찾아줍니다.”

이런 효율적인 복지 전달 체계는  
지난 1980, 90년 호주 정부가 이뤄낸  
공공개혁의 성과입니다.



당시 호주 정부는 국제 경쟁력 약화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아지는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실직자 등을 위한 복지 지출이 늘면서  
재정적자도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정부부처와 공무원을 재조직하는  
행정개혁의 칼을 빼듭니다.

부처 간 통폐합을 통해  
업무, 인력의 중복을 해소했습니다.

행정의 효율화로  
복지 서비스의 부정수급을 통제하면서도  
투명적인 집행과  
전달체계의 관료주의화 해소로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재정적자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대타협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임금인상률을 낮추는 대신  
정부는 물가 안정과 의료보험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 앤드루 스튜어트 / 아델레이드 대학 정치학 교수, 노총 자문위원  
“노사관계위원회는 임금 인상이 통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노조는 단체협상에서 지나친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했고  
일방적인 해고보다는  
인력의 재배치를 택했습니다.

각 부처의 차관들이  
통폐합을 주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도  
개혁에 대한 반발을 줄였습니다.



동시에 강력한 부패 통제에 나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쌓았고  
이는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당시 출범한 호주의 반부패 기구는 독립기관으로  
관계자 소환과 자료제출 요구권, 수색영장 집행과 감청 등  
강력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로버트 월더시/ 호주 반부패기구 부패방지국 이사  
“법의 역할과 선출된 관료들에 대한 신뢰는  
효과적인 사회의 기반입니다. 만약 이들이 부패한다면  
사회적 성취가 줄어들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개혁은 일관되게 추진됐습니다.

호주의 행정개혁은 노동당 정권에서 시작됐지만,  
센터링크 출범 등 실제 개혁의 성과는 보수정권에서 이뤄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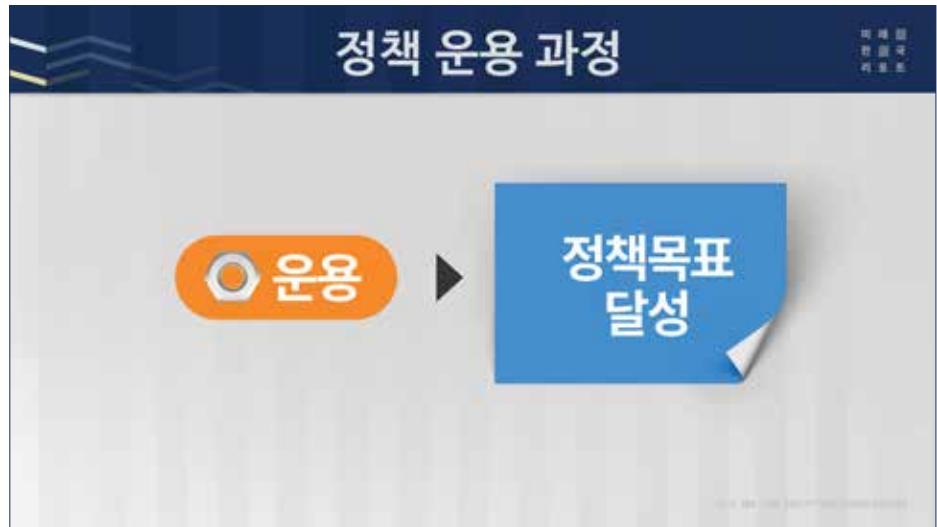
현 정권의  
정치 철학과 정책 방향을 이유로  
기존 정권의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충분한 검토와 미세 조정을 통해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해나갔습니다.

# 줄리 오웬 / 호주 노동당 4선 의원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야당과 협상을 합니다.  
정책의 95%가 야당에 의해 지지 돼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더해지면서  
호주는 80, 90년대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고,  
지난 2004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지금은 5만 달러가 넘는  
세계 9위의 고소득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호주는 정책의 95%가  
야당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정책합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운용과정입니다.  
정책이 의도했던 바와 실제 결과와  
차이를 줄이는 것이  
정책운용 과정의 목표입니다.



정책운용 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변수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고  
이를 조정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정역할을 맡은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집행결과에 대한 성과보상을 강조한다면  
효과적인 정책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정책 조정 기관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정책 조정기관의 권한 수준을 높였더니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줄면서  
정책 현장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화되고  
결과적으로 정책 목표와  
정책 서비스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시뮬레이션 결과를 요약하면,  
정책형성과정에서는 시민참여와 투명성,  
정책합의과정에서는 의회의 행정부 견제,  
정책운용과정에서는 조정기관에 대한  
적정한 권한부여가  
핵심적인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정책역량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으며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가로축은  
GDP 대비 정부지출 수준,  
즉 정부규모이고 세로축은 정책역량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정부규모는 가장 작고  
정책역량은 중하위권에 속합니다.  
앞으로 정책역량을 높여나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그 좌표를 미리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지금 상태에서  
정책역량의 제고 없이  
정부지출 수준만 높여나가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방향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 하단에는  
구 동구권 국가들과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지출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의 정책역량이  
동시에 큰 폭으로 늘어났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미 우리는  
이 방향으로 이동해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면  
정책역량을 높임으로써  
궤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림의 우 상단에는  
정책역량이 높은 큰 정부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로 북유럽 복지국가들입니다.  
정부규모가 크다는 것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구석구석 돌본다는 것은 큰 장점이지만,  
그만큼 많은 재정, 즉 세금이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가 당장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림의 좌 상단에는  
또 다른 선택의 가능성에 열려 있습니다.  
정책역량이 높은 작은 정부들입니다.  
이들도 우리보다는 큰 정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의 거리가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정부지출을 급격하게 늘려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열려 있는 길은  
바로 이 방향입니다.



따라서 정책 역량의 제고를 통해서  
사회의 질이 높고  
지속가능한 착한성장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Presentation 5 **SBS 제언**

미래한국리포트

FUTURE KOREA REPORT  
2015 · S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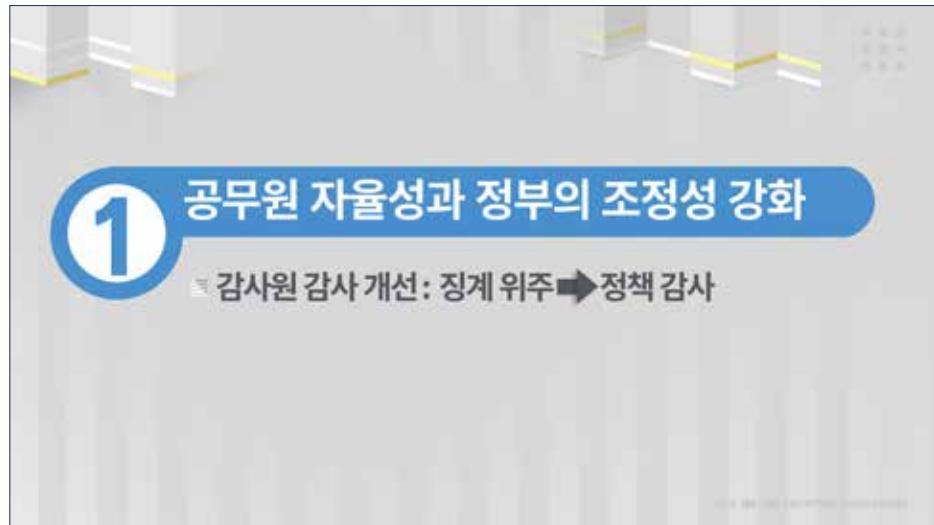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공한 정부들은 이미 20~30년 전부터  
정책과 제도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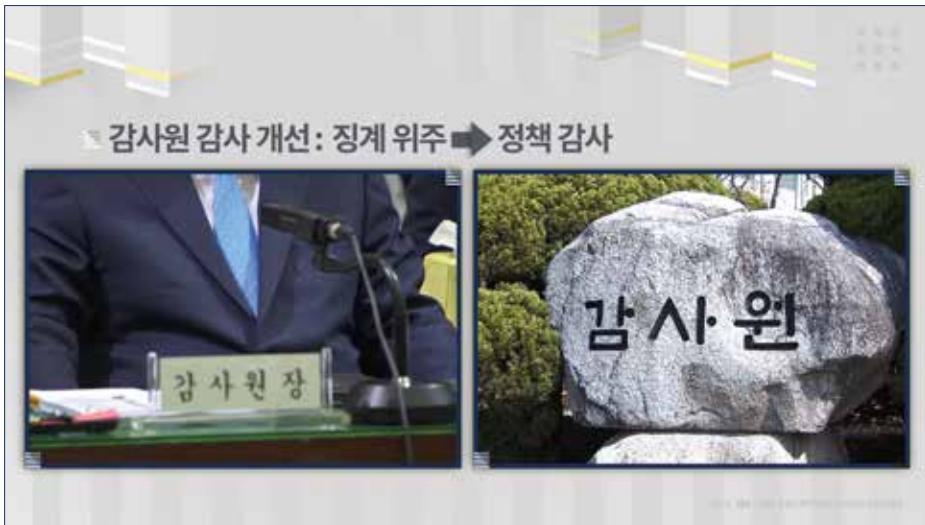
즉 제도 개혁을 통해 공정성과 정책역량을 높여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좋은 정부로 가기 위한  
SBS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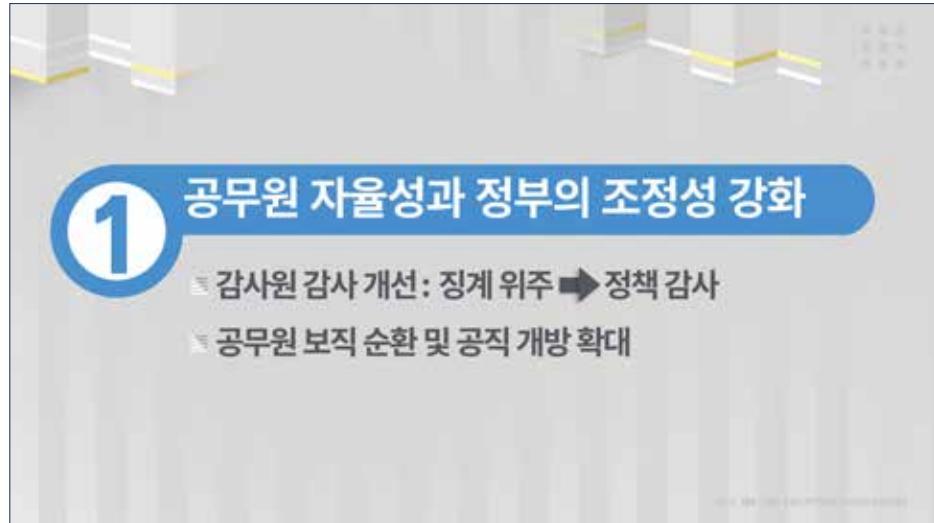
먼저 정부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 사회의 자율성과  
정부 조정력이 발휘돼야 합니다.

현재 징계 위주인 감사원 감사를  
정책 위주의 감사로 바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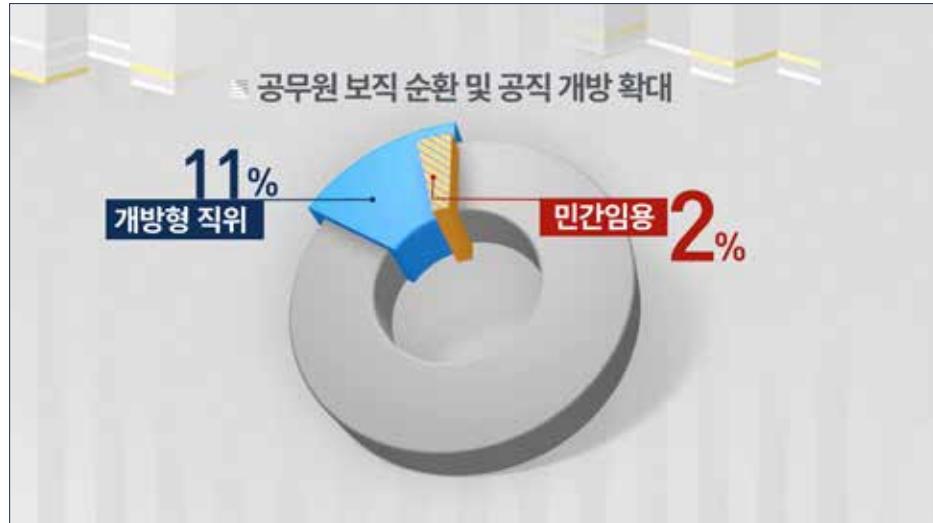
지금처럼 공무원의  
자잘한 잘못을 지적만하는 감사는  
공무원들의 자율성과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정책 감사를 통해서  
일하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부처 이기주의는  
정부 조정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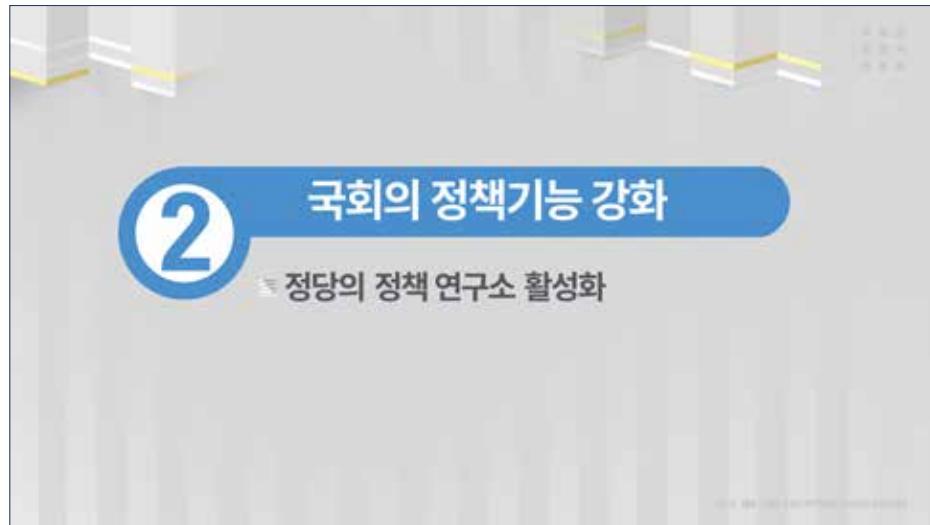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직 순환뿐만 아니라  
공직 개방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개방형 직위는  
정부 전체 국·과장급 직위  
3천 7백여 개 가운데 11%에 불과합니다.

이 중 민간인 임용은 전체의 2% 정도로 매우 저조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직위를 민간에 개방해야  
공직사회의 혈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국회의 정책 기능 강화를 제안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당 정책연구소의 강화를 촉구합니다.

정당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소가 정책제안과 생산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정당 연구소가 발달한 독일의 경우  
정당 재단이 정책 형성과정부터 참여해  
정책 합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크누트 데트레프슨 / 에버트 재단

“큰 정치적인 논쟁에서 재단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일방적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토론의 장으로서 그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국회의 정책기능 강화**

- ▣ 정당의 정책 연구소 활성화
- ▣ 국회에 장기 국가전략구상기구 설치

또한 국회 내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구상하는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핀란드의 경우  
국회에 미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미래위원회는  
새 정부가 집권하면  
반드시 15년 뒤의 비전과 국가 전략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3****정부 신뢰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

- ▣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평가제 도입

셋째로 규제개혁입니다

과잉 규제는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정부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특히 의원 발의안의 경우  
입법예고나 심의를 받을 의무가 없어  
정부입법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에  
규제를 만드는 우회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안을 발의할 때도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 3

## 정부 신뢰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

■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평가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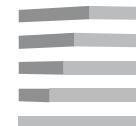
■ 의무이행소송제 도입

또한 규제 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의무이행소송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의무이행소송은  
행정당국이 부당하게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인허가를 명령해  
행정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규제 남용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입을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정부를 위해  
첫 번째, 정부정책역량 강화  
두 번째, 의회의 역할 강화  
세 번째, 규제개혁까지 SBS의 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FUTURE KOREA REPORT

Comment  
**강평**

미래한국리포트

FUTURE KOREA REPORT  
2015 · SBS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SBS에서 정부의 정책역량 제고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아주 유용하게 잘 들었습니다.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대안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 정부 정책역량과 관련해서 꾸준하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부는 문제해결 방식이 매우 단순한 1차 방정식이었다면  
지금은 문제 자체가 고차방정식으로 매우 어렵게 진화되고 있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즉,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체 역량과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 사회의 전체적이고 총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우리의 정부 정책의 목표는  
절대 빙곤 탈출과 같이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목표, 가치관, 이해관계가 같이 충돌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책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우선 각 경제 주체들과 사회 주체들의 타협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지나친 이념 논쟁과, 지역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같은 것들이  
문제해결능력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우리 사회가 지금 꼭 풀어야하는데  
못 풀고 있는 4대 구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 문제, 오늘 많이 지적된 공공부문의 문제, 교육문제, 금융문제 등이  
모두가 풀어야 한다고 느끼지만 어느 한쪽이 나서서 풀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쌓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20년 이상은 5년 단임이 전부다보니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과거보다는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계속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제시된 여러 가지 자율성, 조정성 제고,  
국회 정책기능 강화나 규제개혁 등의 권고는  
매우 유용한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부의 능력 제고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의 정점은 결국 정치권에 있다고 봅니다.  
그려려면 우리 정치권이 민생우선의 확고한 원칙 위에 서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제기되는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미해결 상태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양보와 타협을 하는 관행들이 잘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 정부의 역량제고와 함께 정치권의 노력과 협조,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한 협력관계가 전부 전개돼야  
1차 방정식이 아닌 고차방정식을 풀어서  
대한민국을 선진 국가로 이룩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 한국 리포트

## SBS 미래부

박수언 부국장  
이창재 부장  
홍지영 차장  
정호선 차장  
한승구 기자  
정형택 기자  
윤태욱 차장  
김준용 PD  
이정현



제13차 미래한국리포트

## 광복 70년 좋은 정부의 조건 전환기를 넘어 착한 성장 사회로

2015 · SBS

THE 13th FUTURE KOREA REPORT

## SBS 편성팀 제작리소스파트

## SBS A&T CG



### 제13차 미래한국리포트 “광복 70년 좋은 정부의 조건 / 전환기를 넘어 착한 성장 사회로”

■ 발행 2015년 11월  
■ 발행인 이웅모  
■ 발행처 SBS  
■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61  
■ 전화 02-2113-4192  
■ 팩스 02-2113-4238  
■ 웹사이트 <http://future.sbs.co.kr>

\* 이 책의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주최]

[미디어파트너]

[지식파트너]

[협찬]

삼성전자

GS 칼텍스

청년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한화생명

NICE

미래  
한국  
리포트

FUTURE KOREA REPORT